

## 2026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고용정책 방향 논의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및 2026년 고용영향평가 과제 심의 예정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월 12일(목), 2026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를 개최했다. 심의회에는 노사 대표와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이 참여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2024년~2034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추가 필요인력 전망」, 「2026년 고용전망 및 고용정책 방향」, 「2025년 고용영향평가 결과 보고」에 대해 논의하고, 「2026년 고용영향평가 대상 과제 선정(안)」,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안)」에 대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 [ ① 2024년~2034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추가 필요인력 전망 ]

한국고용정보원이 보고한 「2024년~2034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추가 필요인력 전망」에 따르면, 향후 우리 노동시장은 저출생·고령화의 영향으로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34년 31.7%까지 확대되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2030년부터는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와 AI 등 기술변화의 영향으로 보건복지·정보통신·전문과학기술업(산업)과 전문가·서비스직(직업)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하나, 무인화·산업전환 등 영향으로 도소매·제조업과 판매·생산직에서는 감소하는 등 변화 양상은 산업·직업별로 달리 나타났다. 한편, 향후 노동력의 공급 제약이 완화된다면 경제성장률은 0.4%p 더 상승하고 2034년 취업자 수는 기본 전망의 증가분에서 122만명이 더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 ② 2026년 고용전망 및 고용정책 방향 ]

주요 연구기관들에 따르면 올해 고용 상황은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용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청년 등 취약분야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AI 발전·탈탄소 전환에 따른 대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쉬었음·구직·재직 상황별 청년 대책 마련 및 지역고용활성화 등을 통해 일할 기회 격차를 축소한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중장년·일하는부모·장애인 등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강화해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한다. 또한, 직업훈련·고용노동 AX 전환 및 고용서비스 혁신을 통해 대전환 과정에서 원활한 이·전직을 지원하고,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등 준비된 산업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한편,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결과에 따라,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중장기 노동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신산업 인력 양성 및 다양한 일자리 형태에 대한 안전망 구축 등 노동과 함께하는 성장이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 ③ 2025년 고용영향평가 결과 보고 ]

심의회에서는 2025년 고용영향평가 결과도 보고되었다. 고용영향평가는 정부 정책·제도·법령 등이 고용의 양과 질에 미치는 경로와 영향을 분석하여 해당 정책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일자리의 양과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고용친화적 정책 제언 실시하는 제도이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고용영향' 등 10개 과제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평가 결과를 고용영향평가센터 홈페이지([www.kli.r.kr/eia](http://www.kli.r.kr/eia))에 공개하고, 각 부처 및 자치단체에 평가 결과를 송부하여 정책제언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 [ ④ 2026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안), 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안) ]

이 날 심의회에서는 2026년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안) 및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안)에 대해서도 심의하여 의결할 예정이다.

2026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안)은 총 11개 과제로, 고용 및 산업 전문가, 관계부처, 자치단체 등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AI 등 유망 산업분야(5개), 외국인 고용 등 인구구조분야(2개), 청년일자리·사회적 경제 등 지역정책분야(4개)이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안)은 주된 산업인 철강산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양시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할지 여부와, 작년 8월에 지정되어 지정기한이 도래하고 있는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에 대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을 추가 연장할지 여부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장기 인력 부족과 산업 전환은 구조적 과제”라며, “인구 구조변화와 AI전환 등 기술혁신 속에서 소외되는 계층 없이 누구나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일터 내 격차를 해소하여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고용노동부 장관 모두 발언

2. '24년~'36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추가 필요인력 전망
3. 2026년 고용전망 및 정책방향
4. 2025년 고용영향평가 과제 목록
5.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 개요

담당부서	노동시장정책관 고용정책총괄과	책임자	과 장	이상임 (044-202-7210)
		담당자	서기관	이상혁 (044-202-7292)
		담당자	사무관	김무원 (044-202-7397)
		담당자	사무관	박태군 (044-202-7211)
		담당자	주무관	이혜진 (044-202-7234)
담당부서	노동시장정책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책임자	과 장	지영철 (044-202-7404)
		담당자	사무관	최서현 (044-202-7413)
담당부서	고용지원정책관 미래고용분석과	책임자	과 장	천경기 (044-202-7260)
		담당자	사무관	김주봉 (044-202-7256)
		담당자	주무관	이현민 (044-202-7247)

반갑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입니다.

존경하는 고용정책심의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6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2026년 고용전망 및 고용정책  
방향, 2025년 고용영향평가 결과와 2026년 계획(안),  
그리고 지역 고용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대해  
위원 여러분과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2025년 고용정책의 주요  
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노동시장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고 수준의 고용률(15세 이상 62.9%)을  
기록하는 등 견조한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일터에서 묵묵히 일해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대상별 일자리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청년의 더 나은 일자리 기회 보장을 위해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발표하였고,

중장년을 대상으로 생애 단계별 취업 지원을 강화하여,  
'25년 40~69세 고용률은 72.5%로  
전년 대비 완만한 상승세(+0.5%p)를 보였습니다.

월 최대 250만원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고,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여 '25년 육아휴직자 수(18만 4천명)는  
전년 대비 39.1% 대폭 상승하였고, 육아휴직자 중  
남성, 중소기업 비중은 역대 최대를 기록하였습니다.

정부는 산업 재편에 대비하여 미래 대응 기반도  
확충하였습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신설하여  
석유화학, 철강 등 주된 산업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수 등 5개 지역을 신규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고용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노동시장 진입·활동·전환기에 있는 모든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역량 강화에 초점을 둔  
“노동시장 AI 인재양성 추진방안”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발표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의 고용률은 계속 하락하고  
2·30대 준비중(쉬었음) 청년은 76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건설업, 제조업의 고용 감소세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입니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수는 2030년을 전후로  
감소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경기 변동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산업별로는 돌봄·보건, 전문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인력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일부 제조업과 도소매업 등에서는  
고용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 과정에서 산업·직무 간 인력 미스매치가 확대될  
가능성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여성·고령층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및  
생애 전반의 경력 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미래유망산업 분야로의 인력 양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더불어 AI 등 기술변화와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인력수급전망을 더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2026년 고용전망 및 고용정책 방향입니다.

2026년은 경제성장전략에 기반한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을 통해 전체 고용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 및 AI 확산과 탈탄소 전환에 따른 노동시장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청년 고용은 신규 채용 축소, 경력직 선호 등 구조적 요인으로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주 대통령과 경제계가 만난 자리에서 청년 신규 채용과 지방 투자를 확대하기로 한 만큼 청년에게 일자리 기회가 늘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도 쉬었음·구직·재직 상황별 청년 고용 대책 및 지역고용 활성화방안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중장년·일하는 부모·장애인에게는 맞춤형 취업지원을 강화해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산업전환에 대응한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등 일자리 불안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AI 고용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하고,  
서비스 전달체제와 고용보험제도도 개편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고용영향평가입니다.

고용영향평가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이  
비록 일자리 창출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일자리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고용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언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산업 구조와 고용 형태가 빠르게 변화하고  
AI가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일자리 감소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정책들이 보다  
고용 친화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용영향평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2026년에는 AI 확산과 산업전환, 청년 고용,  
지역 고용 및 외국인력 정책 등 일자리 파급효과가  
크고 구조적 변화가 예상되는 과제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더불어 이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마지막 안건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안)입니다.

먼저, 주된 산업인 금속제조업 및 연관산업의 부진으로 고용감소가 발생하고 있는 전라남도 광양시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한편,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인 6개월이 지역의 고용둔화 대응에 제한적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해 최대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규정을 최근에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심의회에서는 지정 기한이 도래하고 있는 전라남도 여수시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대해 지정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지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기간의 처방이 아니라, 지역의 고용 회복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해당 지역에 대해 고용 충격이 지역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집중적인 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정부업무보고 때  
2026년을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비전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인구 구조변화와 AI 전환 등 기술혁신 속에서  
소외되는 계층 없이 누구나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일터 내 격차를 해소하여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정책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사회자 진행하에  
안전별로 구체적인 보고를 들으시고,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심탄회한 의견과 심도 있는 논의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 '34년까지의 인력공급(경활인구)과 수요(취업자수)를 전망한 결과, 공급 제약으로 경활인구 및 취업자수는 '30년부터 감소 전환될 전망
  - ◆ 그러나, 공급 제약이 완화\*된다면 성장률은 연평균 0.4%p 더 상승하고, '34년 취업자수는 기본전망에 비해 122.2만명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
- \* 우리나라의 여성, 청년, 고령층 경참률을 '34년까지 일본 수준으로 올린다고 가정

□ **인력 공급(경제활동인구) 전망**

- (경제활동인구) '34년 경제활동인구는 '24년 대비 13.6만명 증가, 이는 과거의 증가 규모에 비해 크게 축소

\* 경제활동인구 증감 전망(천명) : ('04-'14) 3,292 ('14-'24) 2,563 ('24~'34<sup>P</sup>) 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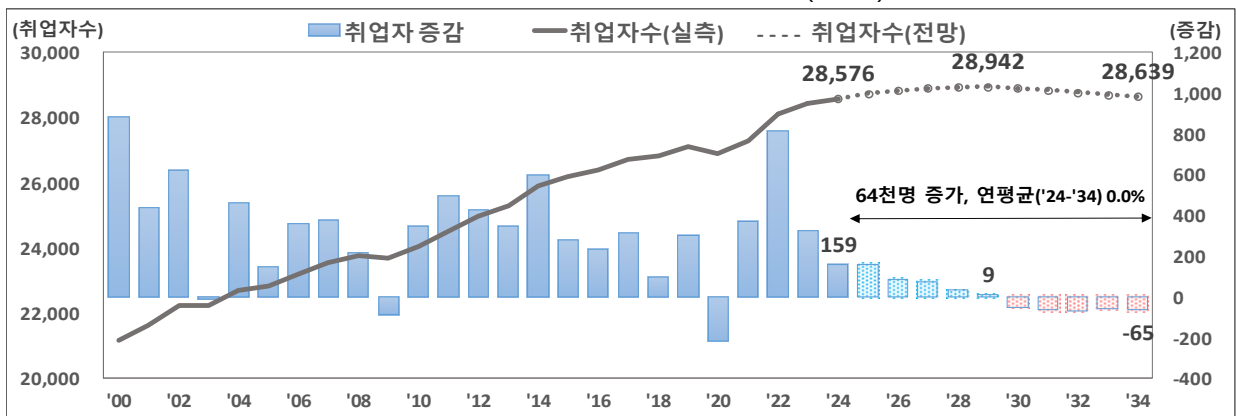
- 전망 전기에는 경제활동인구가 증가('24~'29년 +34.6만명)하지만, 전망 후기('29~'34년 -21.0만명)에는 감소할 전망('30년부터 감소로 전환)
- 양적인 축소 뿐 아니라 경제활동참가 성향이 낮은 고령층 비중 확대에 의해 노동공급 제약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

□ **인력 수요(취업자) 전망**

- (취업자) '34년까지 6.4만명 증가 전망되나, 인력공급 제약으로 전망 후기('29~'34년 -30.3만명)에 감소할 전망('30년부터 감소로 전환)

\* 취업자 증감 추이 및 전망(천명) : ('04-'14) 3,215 ('14-'24) 2,678 ('24~'34<sup>P</sup>) 64

<중장기 취업자수 및 증감 전망(천명)>



- (산업) 고령화·돌봄 수요 확대로 보건복지업(+98.2만명) 취업자가 가장 크게 증가하고, AI 등 기술변화로 전문과학기술업(+13.6만명), 정보통신업(+19.3만명)에서도 증가
  - 온라인화, 플랫폼화 등 산업 환경 변화 및 산업전환으로 도소매업(-43.1만명), 제조업(-20.9만명) 등 취업자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직업) 전문가(+54.7만명), 서비스직(+24.0만명)에서 크게 증가하고, 온라인화·자동화로 판매직(-26.8만명), 장치,기계조작직(-18.0만명), 기능원(-12.8만명) 등에서 감소 전망
- 고용률(15세이상)은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의 영향으로 '24년 62.7%에서 '34년 61.5%로 1.2%p 하락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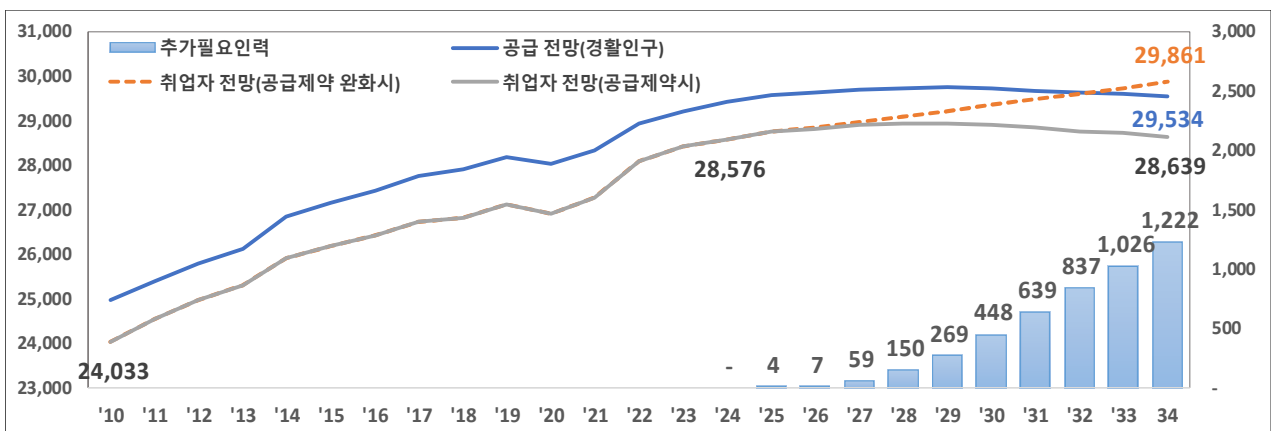
## □ 공급 제약 완화시 인력 수요(추가 필요인력) 전망

\* 저출생·고령화로 노동 공급이 제약되면서 취업자 증가가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므로,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추가로 유입하여야 할 인력 규모

- 모든 연령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음에도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력 공급제약은 취업자 감소를 초래
- 이에, 상대적으로 참가율이 낮은 계층의 경참률을 일본('24년) 수준으로 높인다면 '34년까지 경제성장률은 0.4%p 더 상승(1.6% → 2.0%)하고, 취업자수는 122.2만명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추가 필요인력 122.2만명 = 공급제약이 완화된 경우의 취업자(2,986.1만명)  
 - 기본전망 공급제약이 있을 경우의 취업자(2,863.9만명)

<취업자 및 추가 필요인력 전망(천명)>



## 1 '25년 주요 성과 및 보완점

- (고용정책 주요성과) 인구구조 변화·산업전환 등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정책 기반 마련
  - 쉬었음·구직·재직 청년 지원체계 구축, 중장년 생애단계별 지원 강화 및 육아휴직급여 인상화 등 대상별 지원 강화
  - 구직자·재직자 대상 AI 훈련 지원,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 추진\* 및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 신설 등 산업재편 대응 기반 마련
- \*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개정안 국회 제출
- (보완필요사항) 청년(쉬었음 70만명대)·중장년(조기이직경향 등)·일하는 부모(중소기업 제도활용 여건) 등 어려운 상황 지속
  - 급격한 기술발전이 진행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 확대

## 2 '26년 고용전망 및 여건

- (고용전망) 민간소비 등 내수 중심 경기 개선으로 성장률 개선, 고용률·실업률 등 고용통계도 전년과 유사\*할 것 전망
  - \* 고용률(% 한은): ('25) 62.8 ('26) 62.9 / 실업률(% 한은-KDI): ('25) 2.8 ('26) 2.8
  - 다만 글로벌 갈등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 대외 불확실성 상존
- (정책추진 여건) 성장률 회복에도 불구하고 경력직선호 경향 등 단시일 내 청년고용 상황 개선 한계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AI 기술발전 및 탈탄소 전환에 따른 일자리 영향 확대로 선제적 노동시장 대응 필요

### 3 정책방향

**<전략 목표> 일할 기회 격차 축소, 대상별(청년·중장년 등) 노동시장 진입 지원 및 준비된 대전환으로 “노동이 있는 진짜 성장” 달성**

#### <일할 기회 격차 축소>

- (청년 일할 기회 확대) 쉬었음 청년의 조속한 취업을 위한 대책 마련, 일경험·채용행사 등 일자리 기회 확대 및 재직 청년 적응·성장 지원
- (지역고용 활성화) <sup>가칭</sup>「지역고용활성화법」 입법 지원, 지역간 연계·사회적기업 지원 등 지역일자리 생태계 조성 및 위기 대응 강화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노동시장 참여 확대>

- (중장년) 조기 경력설계 및 맞춤형 신속 이·전직, 주된 일자리 계속고용 지원 등으로 초고령사회의 노동인구 감소에 대응
- (일하는 부모) 부모 모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돌봄시간 확보 및 중소기업의 지원제도 활용여건 개선 등 격차 축소
- (외국인) 외국인력 취업현황 DB 구축 및 노동안전 지원 등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통합관리·보호체계 구축
- (장애인) 일할 기회 확대를 위해 AI 훈련 등 지원방안 다각화

#### <노동있는 준비된 대전환>

- (직업훈련) AI 인력수요에 대응하여 노동시간 전 단계(진입·활동·전환기) AI 역량강화 지원, AI 교육훈련을 위한 훈련 인프라 확충
- (산업전환) 탄소중립·디지털 전환을 포괄하는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 중소기업 생산성 제고 등 취약분야 대책 강화
- (고용서비스) 고용센터 기능 고도화를 위한 고용서비스 혁신 방안 마련, 고용 AX 전환으로 대국민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 (고용안전망) 국세정보를 활용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고용보험기금의 장기적인 재정 안정화 방안 등 마련·추진

분야	과제명
인 구	1. 취업지원 전달체계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 청년·중장년층을 중심으로
	2. 늘봄학교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3.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의 고용영향
산 업	4. AI 바우처 지원사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5.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6.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 정책의 고용영향
지 역	7.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고용영향 - 지역체감형 일자리프로젝트(경북)를 중심으로
	8. 지역 주도 지방소멸 대응 정책에 대한 지원(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고용에 미치는 영향
	9. 영종도 복합리조트 도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자치단체 신청과제)
	10. 제주용암해수산업단지 조성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자치단체 신청과제)

※ 평가결과는 고용영향평가센터 홈페이지(www.kli.r.kr/eia)에 공개 예정(2월중)

- (목적)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하여 고용유지·직업훈련·생계안정 등 지원
- (지정기준) ①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지역에서 ②고용 사정의 급격한 악화가 우려되어 ③시급한 대응이 필요할 것(지정기준 고시 제2조)
  - \* (제1호) 재난: 지역 전체 기업의 10% 이상에게 예측치 못한 휴업 등 발생(우려)
  - (제2호) 주된산업: 주된 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전년동기대비 3개월 연속 감소
  - (제3호) 선도기업: 300인 이상 기업 상시근로자 10% 이상 구조조정 계획 등 발생
  - (제4호) 예외조항: 그 밖에 급격한 고용감소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사유
- (지정단위) 시·군·구(일반구 포함) 단위로 하되, 지역 고용 여건 등에 따라 여러 개의 시·군·구를 묶어서 지정 가능
- (지정절차)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관할 지방관서의 장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정건의 → 고용정책심의회 심의·결정
- (지정기간) 최대 1년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 내용 〉**

지원사업	구분	지원내용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 (우선지원대상기업) 휴업수당의 80% · (대규모기업) 휴업수당의 60%~70%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내용	·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사업을 이전·신설·증설하고 지역주민을 6개월 이상 채용하는 경우 월 통상임금의 1/2(대규모기업은 1/3)을 최대 1년간 지원
사업주훈련지원	훈련비 단가	·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단가의 130% · (1,000인 미만 기업) 기준단가의 80% · (1,000인 이상 기업) 기준단가의 70%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	· 5년간 500만원 한도
	지원비율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및 II유형 중 특정계층 지원율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소득요건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일 3개월 전부터 지정기간 동안 퇴사한 실직자를 취업취약계층으로 포함하여 소득요건 면제
직업훈련생계비대부	대부한도	· 1인당 총 2천만원(월 2백만원)
	대부한도	· 1인당 총 3천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	융자기간	· 1년 거치 3년 상환 / 1년 거치 4년 상환 / 2년 거치 4년 상환 / 3년 거치 5년 상환 中 택1
	소득요건	· 중위소득 판단 시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으로 판단
체불근로자생계비용자	대부한도	· 1인당 총 1.5천만원